

“새만금사업, 정부가 강력 추진해야”

김춘진 “전북도 주도는 갈등해소·재원확보 등에 한계… 전체 용지 53.6% 민자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용지조성과 SOC구축이 지지부진하다. 명품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북도당 핵심당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전북도 주도의 새만금사업은 갈등해소나 재원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만들더라도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머드급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발주도권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허송세월할 수 있다며 전북도 주도의 새만금사업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용지조성에 10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새만금 전체 용지의 53.6%를 민자로 개발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당원들의 화합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은 물론 전북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61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춘진 위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미애 대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황현 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하반기 부회장 선출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대 하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에서 201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의장협의회를 이끌어갈 부회장에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부회장으로 선출된 황현 의장은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정책 생산의 산실이자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도록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사안을 해결하는 모임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제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찾아 전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이날 육상 경기장 등을 직접 찾아가 전북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뛰고 있는 도내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선수단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17개 시·도 중 종합 10위를 차지해 2014년도에 비해 4계단 올라 전북 선수단의 명예를 회복했다.

이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체육회 등이 협의회를 구성,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경기력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의회의 주무과 예산 지원 등도 한 몫 했다.

한편 제9회 전국체육대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며 전북선수단은 47개 종목에 1,570명이 출전, 종합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전주 지법·지검·교도소 부지 이춘석 “문화예술 용도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난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합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전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법원합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줄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신=장영환 기자



순직 소방관 추모...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안전행정부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개시 전 야당 소속 감사위원들이 태풍 차바로 불어난 물살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강기봉 소방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황현·김명지·이행욱 더민주 도당 부위원장 임명

각각 도의회 의장·시의회 의장·도당 상무위원... 지역별 추천 받아 추가 임명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7일 황현 도의회 의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행욱 상무위원 3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도당 당부에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정책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당무환경을 만들고자 선출직 의원을 대표해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상무위원회 위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당부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을 꾀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도당은 앞으로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위원회와 사무처 등 당직인



황현 부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이행욱 부위원장

선에 속도를 내, 내년 대선승리를 위한 조직병에 바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황현 도의회 의장은 “민생경제 파란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상황이다. 도민들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지쳐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새로운 희망이다. 도민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도민을 섬기는 당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군의회의원을 대표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당부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욱 상무위원은 27년 교직생활과 교육학 석사경력의 교육전문가로, 현재 전주해성중교 총동문회장, 전북문학회 상임위원장, 여원 공연시낭송 회장을 맡고 있다.

/신광영 기자

“수상레저면허, 규제완화와 국민안전 맞바꿔”

이용호 “면제교육장 확대로 시험을 민간에 맡겨 안전 우려”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하게 수상레저면허 면제교육장 확대를 추진해 면허발급을 푼발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면제교육장은 일반조정명허(2급)와 요트 조정명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면제교육장은 25개소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7만 3,791건의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

수는 전년 5,000원으로 동 기간 동안 3억 7천여명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을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규제완화와 바꿀 수 있는가?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맞바꾸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

는 수상레저업체 종사자들 역시 면허를 취득할 때를 제외하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안전처는 더 이상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7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휴가철 안전사고 발생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나 수상레저사업자, 조종면허 취득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146건으로 그중 41%가 충돌이며, 전복이 20%로 그 뒤를 이고 있다. 또 사망자 20명, 부상자 150명이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항규칙을 미준수 하는 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처벌되지 않는 이 위안 사례들은 2011년부터 현재가 3,285건에 달하고 있다.

/송승=이양원 기자

국민의당 도당, 백남기씨 일일 상주 나서

고, 백남기씨(68)에 대한 추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일일 상주로서 추모객들을 맞았다.

지난 7일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옆에 설치된 백씨 빈소에는 학생, 시민 등 120여명이 아침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전북대 4학년 김모씨는 “백남기 선생은 젊은 시절에는 통일과 민주화를, 나이 들어서에는 이 나라의 농업과 생명 운동에 투신한 진정한 보수주의자였다”며 “사랑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송동에 사는 박모씨도 “백씨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기 위기에 나섰다”며 “폭력이 없고 평화와 넘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도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백씨 분향소에 상주하며 추모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박재만 원내대표, 삼성 새만금 MOU 철회 관련 “도의회 더민주 의원 총회 개최해 의논 고르”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 1)는 삼성그룹의 새만금 MOU 철회와 관련, “민약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회를 개최해 의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여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 인사의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아 증인채택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박재만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삼성 MOU 증인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여러 방안을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삼성은 새만금에 23조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후 백지화하여 도민들을 실망시키며 MOU 체결과 관련한 의혹을 낳은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신광영 기자

유성열 “이정현 영동 단식, 의원들 최순실 방탄”

국민의당 소속 유성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지난 7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딸의 입학 학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이 저지된 데 이어 새누리당이 교문위 국감 파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자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라고 폭발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중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을 향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원들은 14일 교육부 종합감사 출석을 위해 일주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채택인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최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은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며 증인채택을 저지했다. 새누리당은 전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미르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저지한 바 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우리 소수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정위 신청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이 계속 편파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교문위가 2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13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국민의당이 4명으로 새누리당이 1당”이라며 “새누리당이 무슨 소수당이나, 제1당이 자 집권여당”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 때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해임 조치를 취하진 못하더라도 스스로 국무위원을 사퇴하도록 해야 하는게 도리 아니냐”며 “그런데 야당이 청와대가 해임인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비분강개해서 강경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문위 소속이기도 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투쟁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만 해도 다른 상임위가 아닌 교문위 위원이라면 여야, 정파를 떠나 한 편이라도 누리과정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회의를 일방적으로 불참한 게 어느 당이나, 일방적으로 여당이 불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증인채택 사태만 해도 야당은 책임자가 어려우면 실무자라도 증인채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제 증인은 한 명도 채택 못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염동열 간사가 마치 나 때문에 국감 증인채택이 안됐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걸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채택하기 싫다, (의혹을) 덮어두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불통을 터뜨렸다. /뉴스